



1920년대 식민지 신문검열을 둘러싼 힘겨루기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중심으로

이민주 극동대학교 미래교양대학 부교수

Power Struggle of Newspaper Censorship in Colonial Korea during the 1920s*

Min Ju Lee**

(Associate Professor, Future College of Liberal Arts, Far East University)

Imperial Japan began to allow the publication of Korean private newspapers in colonial Korea in the 1920s, a practice that had been previously prohibited. In the initial stages of these Korean private newspapers, the Japanese authorities endeavored to rigorously regulate them through censorship. On the other hand, Korean private newspapers tried to seize this rare opportunity by publishing articles representing Korean people. As a result, both sides inevitably clashed in the realm of newspaper censorship. However, previous studies on Japanese censorship during this period have focused on the *Chosun Ilbo* and *Dong-A Ilbo*, leaving the censorship of the *Sidae Ilbo* and the *Jungwoe Ilbo* somewhat isolated. Given that the *Sidae Ilbo* and its successor, the *Jungwoe Ilbo*, were among the three major Korean private newspapers published in colonial Korea during the 1920s, studies on the Japanese censorship of Korean private newspapers must include research on the *Sidae Ilbo* and the *Jungwoe Ilb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ensorship on Korean private newspapers in the 1920s by focusing on the *Sidae Ilbo* and the *Jungwoe Ilbo*. For this, this research reviewed censorship records on these two newspapers and examined the details of the administrative sanctions imposed on them, comparing these sanctions with the actual newspaper pages.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are historical documents such as *The Summary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The Monthly Report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and *The Records of Seized Articles from Korean Newspapers*, published by the Book Department, the censorship bureau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dditionally, pages from the *Sidae Ilbo* and the *Jungwoe Ilbo*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is study compared case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with actual newspaper pages to understand how these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reflected in the newspapers in order to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3 Far East University Research Grant(이 연구는 2023년도 극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FEU2023R17).

** minju7@kdu.ac.kr

comprehend the traits of Japanese censorship on *Sidae Ilbo* and the *Jungwoe Ilbo*. In addition, the memoirs of journalists from that time and records from censors who were responsible for censorship were examined to gain insight into the situations of the *Sidae Ilbo* and *Jungwoe Ilb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idae Ilbo* and *Jungwoe Ilbo* encountered numerous "seizures" on a monthly basis, despite their financial challenges. In the case of the *Sidae Ilbo*, there were as many as 11 instances of seizure within a single month during its early period. The *Jungwoe Ilbo*, in addition to facing seizures, also suffered from indefinite suspension, which exacerbated its financial struggles.

Keywords: Japanese Censorship, Korean Private Newspapers, *The Monthly Report of Chosun Publication Police*, *Sidae Ilbo*, *Jungwoe Ilbo*

국문초록

1920년대는 일제가 이전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식민지의 민간신문을 허용하기 시작한 시기로 민간신문 발행초기, 일제는 검열을 통해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자 했고 반대로 조선어 신문들은 모처럼 얻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양자는 신문검열이라는 장(場)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 일제 검열에 대한 연구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의 내용은 마치 섬처럼 외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일보>와 그 뒤를 이은 <중외일보>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3대 조선어 민간신문의 하나였던 만큼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검열을 연구할 때에도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3대 민간지 중 하나였던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대상으로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신문검열의 특성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기록을 검토하여 실제 이들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지면과 대조해 보았다. 분석대상이 된 검열기록은 검열담당부서였던 도서관에서 발행한 연보와 월보 및 압수한 기사를 번역해 게재한 <언문신문차입기사집록>이며 이들 검열기록에서 행정처분 사례들을 모두 찾아내어 분석해 본 후 실제 신문지면을 찾아 행정처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는 매달 다수의 '압수'처분이 내려졌다. <시대일보>의 경우 특히 발행초기에 무려 11건에 이르는 압수처분이 한 달 사이에 내려지기도 했으며 <중외일보>는 압수 처분 이외에도 무기정간을 당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핵심어 : 일제검열, 조선어 민간신문,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출판경찰월보

1. 문제제기

검열은 인류 역사 이래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된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언론에 대한 검열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국가비상시에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검열은 '정부'라는 형태의 국가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일제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한 검열 역시 조선인의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식민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20년대에 행해진 일제의 검열은 다른 시기와 차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1910년 한일강제병합과 동시에 기관지를 제외한 모든 조선어 신문을 없애버렸던 일제가 3.1운동의 저항에 부딪히자 소위 '문화정치'를 도입하고 조선어 신문을 허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20년대였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 언론을 허용했지만 조선어 신문들이 조선통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고자 했고 이는 검열강화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신문검열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현재까지 지면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주로 수행되었다. 신문발행주체가 자주 바뀌고 속간과 폐간이 잦았던 탓에 지면보존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있지 않았던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시대일보>와 그 후신이었던 <중외일보> 역시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3대 조선어 민간지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은 주요 검열대상의 1/3을 제외한 채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3대 민간지 중 하나였던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대상으로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신문검열의 특성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단순히 연구대상의 공백을 메우는 것에서 나아가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이 이들 신문이 발행되던 당시의 검열현황 및 재정적 상황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발행된 <시대일보> 및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해 분석하는 역사적 문헌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수집대상이 된 주요자료는 <시대일보>, <중외일보>의 지면과 검열담당부서였던 경무국 도서관에서 연별로 발행한 <조선출판경찰개요(朝鮮出版警察概要)>, 1928년 9월부터 월별로 발행한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이며, 검열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1920년대 초·중반 압수된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경무국 도서관에서 후에 자료집으로 펴낸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도 함께 분석해 볼 것이다. 이외에 조선어 민간신문의 당시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다른 기록들도 함께 수집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검열기록에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처분 사례들을 모두 찾아내어 분석해 보고, 현재 검토가능한 선에서 실제 지면들을 찾아 해당 기사의 내용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조선어 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일제검열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고,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시대일보〉 및 〈중외일보〉 관련 연구의 경향

〈시대일보〉는 주간지 〈동명(東明)〉이 1924년 7월 제호를 〈시대일보〉로 바꾸어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였다. 그러나 검열과 경영난 등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26년 8월 발행을 중단했고, 발행허가도 소멸되었다. 이후 이상협이 총독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발행하기 시작한 신문이 〈중외일보〉였고 이 역시 경영난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자 후에 발행인과 제호를 두 차례나 더 변경하게 되는데¹⁾,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대상으로 한 1920년대 언론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시대일보〉와 〈중외일보〉 및 그 맥을 잇는 일련의 신문들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와 〈시대일보〉나 〈중외일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 해당 신문에서 활동했던 문인에 대한 연구 등은 부분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다. 〈시대일보〉와 이후 발행된 〈중외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는 발행주체나 제호가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동일신문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으나 조선총독부가 허용했던 3개의 민간지 중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하나의 신문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일련의 신문의 발행과 운영과정, 편집진의 구성과 특성들을 살펴본 연구(김남미, 1982; 박용규, 1996)들이

1) 〈중외일보〉는 〈시대일보〉의 판권을 인수한 뒤 제호만 변경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별개의 주체가 발행허가를 다시 받아 새로 창간한 신문이었으므로 같은 신문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중외일보〉의 후신으로 발행된 〈중앙일보〉와 〈조선중앙일보〉는 제호는 바뀌었으나 〈중외일보〉의 지령을 이어받아 발행을 지속했고, 당시 조선의 언론계에서조차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전신(前身)과 후신(後身)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기에(청광, 1931, 12) 이들 신문들이 같은 계열로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되도록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별개의 신문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적이나마 수행된 바 있고, 조선어 신문에 게재된 특정 주제의 기사를 분석하는 가운데 〈시대일보〉나 〈중외일보〉의 기사내용을 살펴본 연구(전성곤, 2006; 한규무, 2003)들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중외일보〉에 ‘번안소설’을 다수 게재했던 김기진에 대한 연구(김영애, 2014)나, 〈중외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이육사에 대한 연구(홍석표, 2022) 등은 〈시대일보〉나 〈중외일보〉에서 활동했던 문인들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식민지 시기 신문을 일종의 ‘기구’로 파악하고, 민족주의 운동 혹은 문학시장의 교환기구로 어떻게 기능했는가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 신문을 문학텍스트의 유통기구로 보고,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수록된 문학텍스트의 종류와 규모를 분석한 연구(유석환, 2019)와 1920년대 중반 언론계에서의 활동을 통해 민족주의 좌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박용규, 2009)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시대일보〉와 그 명맥을 잇는 신문들에 대한 연구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다는 것인데(박용규, 1996; 유석환, 2019), 이는 현재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직접적으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한국언론사 전체의 일부로 언급되거나(김민환, 2006; 최민자·김민주, 1978), 일제언론탄압의 실상을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가운데 언론통제 대상의 일부로서 언급되는(정진석, 1975) 등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직접적인 연구라기보다 〈중외일보〉에 게재된 아일랜드 기행문 관련 필화사건의 배경과 이로 인해 내려진 사법 및 행정처분의 내용과 영향을 기술한 기사(정진석, 2012)를 통해서도 〈중외일보〉 관련 검열상황을 엿볼 수 있다.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을 다룬 연구는 아니지만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검열 상황을 개괄한 연구들은 본문에서 살펴볼 〈시대일보〉 및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의 제도적 배경, 피검열자들의 검열대응, 검열장(場)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관계 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열연구회(2011)의 저서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은 식민지 검열의 정책과 제도, 검열된 신문 및 잡지 텍스트, 음반 및 연극에 대한 검열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보았고, 문학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검열제도와 문인들의 검열우회 방식, 검열된 텍스트의 복원방법까지를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한만수, 2015), 식민지 조선 출판시장의 이중성을 전제로 식민지 문역(文域)에서 이루어진 검열상황과 검열된 텍스트에 드러난 피식민자의 언어를 분석한 연구(한기형, 2019) 등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구체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민간신문에 대한 검열을 다룬 연구로는 실제 검열된 신문지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어 민간신문의 창간부터 폐간까지 일제 검열의 특성을 살펴본 〈제국과 검열〉(이민주, 2020)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일보〉 혹은 〈중외일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대일

보)부터 <조선중앙일보>에 이르기까지 통사적으로 그 역사를 들여다보거나, 조선어 신문의 일부로서 기사내용을 분석하고, 특정 문인들이 해당 신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검토해보는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도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조선총독부의 검열대상으로서 <시대일보>나 <중외일보>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언론에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가 갖는 중요성은 3대 민간지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만큼, 본 연구에서는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일체 검열의 내용을 들여다 봄으로써, 그 동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나머지 하나의 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선총독부의 검열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행해진 일체검열의 나머지 퍼즐조각들을 찾아내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역사적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일체 검열의 특성에 접근해 보기 위해 관련 사료를 수집하여 검토·분석하는 역사적 문헌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분석대상이 될 사료는 크게 검열대상이 된 신문사료와 검열에 대한 기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주요사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문사료의 경우, 아카이브 형태로 신문지면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접근도 비교적 용이한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와 달리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는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지면도 유실된 것이 많아 체계적이라고 보기 힘들었으나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남아 있는 지면을 자료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기 시작했고, 부분적이거나 축소본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20년대 발행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의 지면 중에서 이용가능한 전 지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는 1920년대에 지속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발행된 시기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924년 4월~1926년 8월 사이에 발행된 <시대일보>의 지면과 1926년 11월~1929년 12월에 발행된 <중외일보>의 지면이다.

검열당국의 검열관련 기록은 1926년 독립된 검열담당부서가 설립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시대일보>와 <중외일보>가 발행되던 시기는 검열당국이 검열기록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되던 시기 전체에 걸쳐 일관적으로 행정처분 건수를 기록한 기록물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제목을 달리하며 1920년대 후반부터 발행된 연보와 1928년 9월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 아마도 검열당국이 보관하고 있었을 조선어 민간신문 압수기사들의 내용을 1930년대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발행한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 등에서 행정처분 건수와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열당국의 기록들을 살펴보자. 1920년대 검열당국의 기록들 중에 가장 포괄적인 것은 연보형태로 발행된 <조선에 있어서 출판물개요(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일 것이다. 조금씩 제호가 달라지기는 했으나 검열담당부서인 도서과가 설립된 이후 꾸준히 발행되었고, 세세한 행정처분 사례가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검열 초기 가장 중요한 행정처분이었던 압수관련 기사 건수나 주요 내용의 단조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29년분의 조선 내 출판물 발행사항과 취체(取締)상황을 정리해 1930년에 발행한 <조선에 있어서 출판물개요>에서 소화(昭和) 3년 즉 1928년부터의 행정처분 건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1928년 9월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는 경무국 도서과의 검열기록 중 가장 자세한 기록으로서 무엇보다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삭제나 '주의' 처분을 받은 기사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외일보>에 대한 일제 검열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928년 9월에 간행된 1호부터 1929년 12월호(16호)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압수처분을 받은 조선어 신문 기사를 모아 엮은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도 검열당국의 주요 검열기록 중 하나이다. 검열당국은 1932년 6월, 압수한 조선어 신문기사들을 번역하여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이라는 제목 아래 <동아일보>, <조선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세 권으로 엮어 냈고, 이후 1933년부터 1936년까지의 압수기사들을 모아 1937년 5월 또 한 권을 발행했다.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은 압수된 기사의 내용을 조선어 민간신문 발행 초기부터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보나 월보가 발행되지 않은 시기에 압수를 당한 기사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일제 검열의 특성에 접근해 보기 위해 먼저 검열당국의 기록에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찾아 검토해 본 후, 해당 행정처분들이 실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 지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대조해 보고 행정처분 자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검열 실행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대일보>와 <중외일보>가 발행된 시기가 검열기구의 체계화 시기와 맞물려 있어 각각에 대한 검열기록 체계가 달랐던 만큼, 전자는 '압수'기록에 초점을 두었고 후자는 <조선출판경찰월보>의 '압수'와 '삭제'기록에 초점을 두었다. 이외에도 당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의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기자들의 회고록, 검열을 담당했던 검열관들의 기록 등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이다.

4.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언론상황과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검열현황

1910년 강제병합과 동시에 조선에 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치(寺內正毅)는 ‘신문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그 명성에 걸맞게 부임 직후 조선어 신문은 기관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없애버렸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라는 거족적인 저항에 부딪치자 결국 일제는 새로운 총독을 부임시켰으며 ‘문화정치’라는 미명 아래 조선인이 발행하는 민간신문을 허용했다. 물론 조선어 민간신문의 허용은 조선인의 목소리를 들어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아니었다. ‘문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소요 전에 불온한 사상이 유입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조선인이 읽는 언문신문은 어용지 하나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다는 핑계에서는 민의 민심의 귀추를 알 수 없어 오히려 의심 암귀(暗鬼)를 만드는 여러 유언비어가 퍼지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선어 신문의 발행을 허용하게 된 것이었다(松崎時勉, 1919, 6). 다시 말해 ‘유언비어’를 막고 불온한 사상이 조선인 사이에 유입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서 조선어 민간신문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어 민간신문을 어쩔 수 없이 허용하기는 했으나, 이들이 조선 민중을 선동하거나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기를 바라지는 않았고 따라서 허용된 이들 신문을 강력하게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전에는 경무국에서 담당하던 검열업무를 독립시켜 1926년 별도의 부서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선어 민간신문을 허용하면서도 그 내용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법적 근거에 기반한 행정적 검열이 가능했었기 때문이었다. 1907년 제정된 이래 조선어 민간신문이 사라질 때까지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았던 소위 ‘신문지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검열을 가능하게 했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에 앞서 내부(內部)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해야 한다

즉, 조선총독부는 발행 전 납본조항에 근거해 사전검열을 행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신문지법 제21조에 명시된 바, 신문기사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壞亂)’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압수’하거나 ‘발행정지’, 혹은 ‘발행금지’를 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신문지법 제21조에서 언급하는 ‘압수’와 ‘발행정지’ 및 ‘발행금지’가 주된 행정처분의 내용이었으나 이외에도

법규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처분으로 작용했던 ‘주의’와 ‘삭제’ 처분도 존재했다.

이들 행정처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는 집필에 주의하라는 경고의 뜻으로 실제 작성된 기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삭제’부터는 기사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삭제’처분을 받으면 문제가 된 기사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삭제한 후 인쇄하여 배포할 수 있었다. ‘압수’처분은 기사의 내용이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신문의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소유권을 포함하여 인쇄된 신문 전부를 압수해 가는 것이었다. ‘발행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발행의 정지를 명령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신문사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었다. 가장 극단적인 행정처분인 ‘발행금지’는 신문허가 자체를 취소해 신문을 폐간에 이르게 하는 조치였다. 서술한 순서대로 행정처분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어 신문을 일종의 도구로서 유지하는 것이 식민통치 방식의 일환이었던 만큼 ‘발행금지’는 일제 말기까지 조선어 신문에는 내려진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실질적 행정처분 중에서 가장 강한 조치는 ‘발행정지’였다고 할 수 있고, 이 ‘발행정지’가 1920년 처음 조선어 민간신문이 허용된 이후부터 1940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내려졌는지 살펴보면 1920년대 일제 검열의 특성에 접근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조선어 민간신문에 내려진 ‘발행정지’ 처분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 The Number of Suspension on Korean Private Newspapers under the Newspaper Law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²⁾
대정(大正)9년 (1920년)	2 (8.27~9.2), (9.5~11.24)	1 (20.9.25~21.1.10)	
대정(大正)14년 (1925년)	1 (9.8~10.15)		
대정(大正)15년 (1926년)		1 (3.6~4.19)	
소화(昭和)3년 (1928년)	1 (5.9~9.19)		1 (28.12.6~29.1.17)
소화(昭和)5년 (1930년)		1 (4.15~9.1)	
소화(昭和)11년 (1936년)		1 (36.8.27~37.6.2)	
계	4	4	1

출처: 朝鮮總督府 警務局 (1938). 《朝鮮出版警察概要》, 156쪽에서 재구성

〈Table 1〉을 살펴보면, 1930년대에 비해 1920년대, 특히 조선어 민간신문 발행초기에 ‘발행정지’ 처분이 가장 많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다. 막 발행되기 시작한 조선어 민간신문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압수’처분은 적게는 월별 1~3건, 많게는 10건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조선어 민간신문에 내려져 특정 기사 내용을 통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검열당국의 처분에 대해 조선어 민간신문사들은 여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특히 조선어 민간신문이 발행되기 시작한 1920년대 초반의 경우 검열당국의 행정처분들을 오히려 조선어 민간신문사가 언론기관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독자들에게 확인받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이는 “조창기의 일간신문은 이들이 멀다 하고 일본 총독부에게 발매금지, 압수처분을 당했고 그때마다 배달원들이 뜰에 모여 만세를 불렀다”는 주요한(1978, 111쪽)의 회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동적으로 행정처분을 환영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검열당국에 항의하기도 했다. 1934년 9월 〈삼천리〉 9호에 게재된 ‘총독부를 싸고도는 신문기자진(陣)’에 따르면, 〈동아일보〉에서는 당시 동경유학생계에서 쟁쟁한 ‘이론분자’였던 최원형과 한위건을 총독부에 출입시키고 운전기가 돌아가는 중에 경찰관들이 몰려와 압수를 명할 때면 이상협, 장덕수 등이 인력거를 몰아 총독부에 들어가서 고등경찰과장과 담판을 지었으며, 그래도 답이 시원치 않으면 정무총감, 총독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한다. 신문발행을 둘러싼 검열당국과 피검열자 사이의 이러한 ‘힘겨루기’ 양상은 특히 민간신문 발행 초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³⁾

다음에서는 ‘압수’나 ‘삭제’ 처분 등이 어떻게 조선어 민간신문에 적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5. ‘압수’ 기사를 통해 살펴본 〈시대일보〉 검열의 특성

〈시대일보〉는 3개의 조선어 민간신문을 허용한다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발행인 민원식이 피살된 이후 폐간된 〈시사신문〉의 뒤를 이어 1924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허가를 받을 당시 친일적 인물이 주축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일보〉도 총독

2) 〈조선출판경찰개요〉에는 〈조선중앙일보〉로 표기되어 있지만 1928년에는 제호가 〈중외일보〉였으므로 〈중외일보〉로 표기하였다.

3) 검열양상이나 신문발행 상황이 달라지는 1930년대 이후로 대응양상은 또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 더 구체적인 조선어 민간신문의 대응양상에 대해서는 이민주(2018)를 참고.

및 총독의 고문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와 친분이 있었던 최남선과 진학문을 중심으로 발행 허가를 받아 1924년 3월 31일에 창간되었다(이형식, 2018). 여기에는 ‘민족 개량주의’를 확산시키고 소위 ‘민족 개량주의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체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시대일보>는 약간의 창간 비용만 마련한 채, 주식회사 설립에까지는 이르지 못해 초기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박용규, 1996). 여기에, 창간 당시의 기자들 중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았고, 특히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신간회 창간에도 관여했던 안재홍과 사회주의자였던 주종건 등이 사설을 맡아 집필했었기 때문에 압수나 삭제와 같은 행정처분도 잦았다.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를 당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줄 수 있는 일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대일보>에 대한 검열당국의 행정처분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시대일보>가 발행된 시기에 검열당국이 조선어 신문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기록한 공식적인 검열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검열을 담당했던 부서는 1925년까지 조선총독부 경무국 고등경찰과였다. 그러던 것이 검열업무가 많아지자 1926년 4월 고등경찰과 내 도서계통을 독립시켜 별도의 ‘도서과’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후 도서과에서 연보나 월보와 같은 형태로 검열기록을 남기게 되었기 때문에 1926년 8월 발행을 중단한 <시대일보>의 경우, 검열기록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검열당국이 보관하고 있었을 ‘압수’ 기사를 번역하여 1932년 간행한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에 수록된 기사들을 통해 대략적으로 월별 압수기사 건수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다음은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을 바탕으로 <시대일보>에 대한 압수건수를 월별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2. The Number of Seizure Orders on *Sidae Ilbo*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24				3	5	7	5	(휴간)	7	10	11	8
1925	3	4	6	4	3	5	2	2	6	3	5	1
1926	1	3	1	4	3	9	4	2				

보천교 사건으로 인해 자진휴간 중이었던 8월을 제외하면 매달 적게는 1~3건, 많게는 11건에 이르는 ‘압수’처분이 <시대일보>에 내려졌음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발행초기에 해당하는 1924년을 보면 한 달에 11건에 이르는 압수가 행해지기도 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달 신문발행분의 1/3 이상을 압수로 빼앗긴다면 그 경제적 타격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삭제’처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1920년대 초·중반 조선어 민간신문에 내려진 ‘삭제’ 처분 건수나 내용을 찾을 수 있는 사료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파악가능한 ‘압수’ 기사들을 대상으로 언론통제의 대상이 된 기사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다음은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에 기록된 <시대일보> 압수기사 중에서 사건보도성 일반기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들을 추출하고 이들이 실제 신문지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남아있는 신문지면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3. Records of Seized Articles of Sidae Ilbo and the Status of Newspaper Pages

처분 날짜	기사제목	기사존재여부	기사위치	비고
24. 4. 18	모독당한 조선민중	지면없음		
24. 4. 26	미국의 동점과 동아의 전도(前途)	기사존존	2면 상단	사실
24. 4. 30	제도(濟度)치 못할 인종적 갈등	삭제	2면 상단	사실
24. 5. 4	소위 각파 연맹의 취지에 대하여	기사존존	2면 상단	사실
24. 5. 6	때는 왔다	기사존존	2면 7단	분화구
24. 5. 22	살기(殺氣)에 싸인 문회정치	지면없음		사실
24. 6. 8	전쟁복을 울리며	지면없음		사실
24. 6. 17	우려할 학계의 현상	기사존존	2면 상단	사실
24. 6. 18	소위 공작자대회에 대해	기사존존	2면 상단	사실
24. 9. 5	사선(死線)에 선 우리	기사존존	3면 우상	재경시화
24. 9. 25	황해도윤 반미군에게	삭제	2면 좌하	분화구
24. 9. 27	정육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기사존존	1면 우상	오늘일내일일
24. 10. 1	장래 어찌하려는가	기사존존	2면 상단	사실
24. 10. 18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기사존존	1면 우상	오늘일내일일
24. 10. 26	불법행위의 이 현상	지면없음		3,4면만 존존
24. 10. 29	기근 구제와 당국의 태도	기사존존	2면 상단	사실
24. 10. 31	납세의무의 근본의의	기사존존	2면 상단	사실
24. 10. 31	11월 7일 기념	기사존존	3면 우상	재경시화
24. 11. 3	기근구제회 금지의 보도를 접하고	지면없음		
24. 11. 9	러시아가 아닌 다음에야 농농기념이 웬말이나	지면없음		
24. 11. 10	농업 자본주의화와 소작인 운동	지면없음		
24. 11. 11	기로에 선 우리의 입장	지면없음		
24. 11. 14	잡식과 구축	지면없음		
24. 11. 16	무명의 청년운동가의 궤기를 촉구함	지면없음		
24. 11. 18	실직자 대책은 여하	지면없음		
24. 11. 26	언론자유와 사회적 가치	지면없음		11월 지면 전체 없음
24. 12. 2	친일인가 배일인가	지면없음		
25. 1. 4.	금년의 소작문제	지면없음		
25. 1. 23	차호 동포여	기사존존	3면 상단	사실자리이동

25. 2. 12	인동(仁洞)청년에게	지면없음	2월 지면 전체 없음	
25. 2. 22	역경생활과 민족성	지면없음		
25. 3. 3.	모르히네 중독자 만연을 보고	지면없음	3월 지면 전체 없음	
25. 3. 11	정치적 봉쇄와 경제적 봉쇄	지면없음		
25. 4. 22	문화정치의 금석	지면없음	4월지면은 일부만 있음	
25. 5. 18	귀임한 재등(齋藤) 씨	지면없음		
25. 6. 18	조선인의 보호와 취체	기사잔존	1면 상단	사실자리이동
25. 6. 26	대외로써 웅단하라	기사잔존	1면 상단	사실
25. 11. 7	농로 혁명 기념일	기사잔존	1면 상단	사실
26. 6. 11	불안 중의 동요	기사잔존	1면 상단	사실
26. 6. 26	본보 함흥 사건의 낙착	기사잔존	1면 상단	사실
26. 7. 5	천안청년들이여 단결하라	기사잔존	3면 좌중	지방만필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은 ‘압수’처분을 받은 기사들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단순 게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아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 어떤 성격의 기사가 압수를 당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지면을 찾아보면 검열당국이 어떤 성격의 기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압수’처분을 받으면 해당 신문을 압수해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 있는 지면이 없어야 하지만, 그날그날 바로 인쇄해서 배포해야 하는 신문제작의 특성상 인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열이 이루어진 탓에 지면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었다. 위 표에 기입된 바와 같이, 지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상당수 압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대일보〉 자체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까닭에 지면 보존 여건이 좋지 않아 1924년 11월분, 1925년 2월분, 1925년 3월분 지면이 전부 유실되어 없고 1925년 4월분도 일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 하면, 문제가 된 기사만 지워져 ‘삭제된 흔적’을 남기고 지면 자체는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1924년 4월 30일자 사실 ‘제도치 못할 인종적 갈등’이 대표적이다.

남아 있는 지면들만을 대상으로 압수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2면 상단에 위치해 있었던 사실과 1면 제호 바로 좌측, 즉 가장 처음 독자들이 읽게 되는 위치에 게재되었던 ‘오늘일 내일일’, 3면 도입부에 위치해 있었던 ‘재경시화(財經時話)’ 등에 검열당국이 특히 유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지면을 읽을 경우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위치이면서 지면 구성상 가장 중요한 기사들을 위치시키는 우측상단에 위치한 기사들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언문신문차압기사집록〉과 남아 있는 지면을 바탕으로 압수된 기사들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크게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친일과 혹은 일본관리 비판’, ‘민족 상황 비판 및 독

립정신 고취' '일본의 조선통치 비판' '사회주의 사상 고취' 등이 그것이다. 1924년 3월 11개 친일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각파유지연맹'을 비판한 1924년 4월 18일자 사설 '모독당한 조선민중'과 1924년 5월 4일자 사설 '소위 각파 연맹의 취지에 대하여가 친일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압수당한 대표적인 사설들이다. 고문이나 유부녀 강간 등 일본인 관리들의 악행을 비판한 것도 민심의 불안을 야기하고 조선 통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압수대상이 되었는데, 1924년 9월 27일자 '오늘일 내일일'에 게재된 기사 '정육에는 절제가 필요하다'와, 겉으로는 문화정치를 내세우면서 일본인 관리의 고문과 학살이 자행되는 현실을 비판한 1924년 5월 22일자 사설 '살기에 싸인 문화정치', 황해도지사 이이오(飯尾藤次郎)를 저능아라고 비판한 1924년 9월 25일자 '분화구'란의 '황해도윤 반미군에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조선인의 비참한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압수된 사설들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으로 '목불인견'의 차별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삭제되어 실제 기사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1924년 4월 20일자 사설 '제도(濟度)치 못할 인종적 갈등'에 대해 <언문신문차압기 사집록>에서는, 5단락에 이르기까지는 일미관계를 논하지만 전혀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가 6단락에 이르러 갑자기 일선(日鮮) 관계를 언급한다며 해당 부분만 번역해 놓았다. 해주 용당포 앞바다에 정박 중인 일본 구축함을 관람하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갔던 학생들이 충돌로 인해 바다에 빠지자 일본인만 구출하고 조선인들은 구조하지 않아 목숨을 잃었음을 비판한 것으로 일본인의 '집념 깊은 근성악'을 지적하고 '승냥이와 양', '독수리와 비둘기'에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을 비유했다. 이외에도 지방의 '대참사'와 관련하여 일본인 경찰에 사법적 처분이 없음을 비판한 1924년 10월 26일자 '불법행위의 이 현상', 조선인의 기근 구제와 실업자 구제 대책을 방해하거나 세우지 않는 행태에 대해 언급한 1924년 10월 29일자 '기근 구제와 당국의 태도', 1924년 11월 18일자 '실직자 대책은 여하' 등도 유사한 내용으로 압수를 당했다. 이러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일제 치하 현실에 대한 비판은 곧 독립정신을 고취하거나 조선민중의 단결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어 1924년 5월 6일자 '분화구'란 '때는 왔다'와 1925년 1월 23일자 '차호(嗟乎) 동포여' 및 1925년 2월 12일자 '인동(仁同) 청년에게', 1926년 7월 5일자 지방만필 '친안청년들이여 단결하라' 등과 같은 기사들도 압수되었다. 한편, 1924년 10월 18일자 '오늘일 내일일'란의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와 1924년 10월 31자 사설 '납세의무의 근본의의', 1925년 4월 22일자 '문화정치의 금석(今昔)', 1925년 6월 26일자 사설 '대의로써 용단하라' 등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통치를 부인 혹은 비판하는 내용으로 압수처분을 받았다.

'압수' 처분을 받은 <시대일보> 기사들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점은 사회주의 선동과 관련된 사설이나 논설들이 많다는 점이다. 1924년 9월 5일자 '재경시화'란의 '사선에 선 우리'라는 기사

는 유물사관을 소개하면서 ‘이중의 착취’를 당하고 있는 조선사람들이 단결할 것을 주장하였고, 1924년 11월 10일자 압수기사 ‘농업 자본주의화와 소작인 운동’, 1924년 11월 16일자 ‘무명의 청년운동가의 꺾기를 촉구함’ 및 1925년 1월 4일자 ‘금년의 소작문제’ 등도 모두 자본주의나 소작농 문제 등을 통해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압수당했다. 러시아 혁명을 기념하는 글도 자주 게재했었는데 러시아 혁명 7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이었던 1924년 10월 31일자 ‘재경시화’란의 ‘11월 7일 기념’과 일제의 러시아 혁명 기념 강연회 금지를 비판하는 1924년 11월 9일자 ‘러시아가 아닌 다음에야 노농기념이 웬말이냐’, 1925년 11월 7일에 또다시 러시아 혁명을 기념하는 내용을 게재한 ‘농로 혁명 기념일’ 등이 대표적 압수기사이다.

‘압수’처분이 이 정도로 빈번했으니 ‘삭제’처분 또한 많이 당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기사들이 ‘삭제’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아 신문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압수’를 당한다는 것은 신문사 경영에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근무하다 1925년 <시대일보>에 입사한 서범석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의 시대일보는 극도의 경영난에 빠져서 50원 월급은 그달부터 잘해야 20, 30원 실수(實收)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서범석, 1978, 187쪽).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가 조선어 신문사에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혔는지는 <철필>에 게재된 유광렬의 기사 ‘사회면 편집에 대한 의견고심란’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압수가 되면 한 두 시간 내에 5, 6백 원의 손해를 입게 되나니 빈궁한 조선인 신문사로서는 간부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편집기자도 썩 미안한 일’이었다는 것이다(유광렬, 1930, 8). ‘압수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던 잡지사의 경우 더욱 극단적이어서 압수 후 임시호를 낸 잡지 <개벽>사는 ‘본 임시호를 읽을 이에게’라는 제목 아래 압수를 ‘꿈에 들어도 학질이 떨어질 만한 험악한 소식’이라며 불평을 토로했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달리 재정적 여건이 열악했던 <시대일보>에게 ‘압수’처분은 더욱 험악한 소식이었을 것이고 1924년 10월과 11월의 경우처럼 한 달 발간분의 1/3 이상이 압수를 당한다면 경영난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시대일보>는 계속되는 경영난 끝에 1926년 8월 발행을 중단했고 발행허가도 소멸되었다.

6. <조선출판경찰월보>의 기록을 통해 본 <중외일보> 검열의 초점

<시대일보>의 발행허가가 취소된 이후 총독부로부터 그 판권을 허가받아 새로운 신문을 발행한 것은 이상협이었다. 이상협은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기자였으며 사이트 총독과도 자주 면회

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강동진, 1980). 일제는 <시대일보>의 후신도 민족주의자들이 아닌 친일적 성향의 주체에게 그 발행을 허가했고, 이상협은 <시대일보>의 이름을 이어받지 않고 새롭게 <중외일보>를 창간해 1926년 11월 15일 제1호를 발간했다. 그러나 실제 <중외일보>에서 활동했던 기자들은 <시대일보> 시절의 기자들과 거의 동일했는데, 전 사원을 전부 유입시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김팔봉, 1978). <중외일보>의 재정상황은 <시대일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초기부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창간 후 4개월부터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형세가 되어 편집국 기자와 사진부장이 매일 일급을 받는 형태로 2년을 유지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검열로 인한 '압수'와 같은 처분은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1928년 12월 6일자 사설 '직업화와 추화(酬化)'로 인해 검열당국으로부터 '발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42일 간의 정간이 끝나고도 2월이 될 때까지 신문을 발행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다음에서는 <중외일보>에 대한 일제의 검열을 검열기록과 실제 신문지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검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외일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우선 1930년 발행한 <조선에 있어서 출판물 개요>에 게재된 '조선인 발행 신문지 행정처분 비교표' 내 월별 압수건수이다.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월별로 압수건수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 <중외일보>에 대한 건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Table 4. The Number of Seizure Orders on Jungwoe Ilbo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26									허가			3
1927	3	4	3	4	3	1	1	2	2	4	3	7
1928	3	4	1	2	7		3	3	1			1
1929		1	1	3			2	1	4	3	2	7

출처: 朝鮮總督府 警務局 (1930).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135쪽에서 재구성

1926년 9월 허가를 받고 11월부터 발행한 이래 매달 1~3건, 많은 경우 7건에 이르는 '압수' 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요한 행정처분이기는 했으나 '압수건수'만으로 특정 신문에 대한 검열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불충분한 면이 있다. 다행히 <시대일보>와는 달리 <중외일보>의 경우, 도서과 설립 이후 발간되기 시작한 <조선출판경찰월보>(이하 <월보>)에 월별 '압수' 건수는 물론이고 '삭제' 건수와 행정처분을 받은 기사의 내용요약까지 기록되어 있어 좀 더 자세히 검열된 사항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다음은 <월보> 1호(1928년 9월분)부터 16호(1929년 12월분)까지에 기록된 <중외일보> 관련 '삭제' 및 '압수' 건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Table 5. The Number of Erasure and Seizure Orders on Jungwoe Ilbo

기간(호수)	압수건수	삭제건수	비고
28년 9월분(1호)	1		
28년 10월분(2호)		1	
28년 11월분(3호)		2	
28년 12월분(4호)	1	1	
29년 1월분(5호)			장기간
29년 2월분(6호)	1		
29년 3월분(7호)	1	2	
29년 4월분(8호)	3	1	
29년 5월분(9호)		1	
29년 6월분(10호)	1	1	
29년 7월분(11호)	2	2	
29년 8월분(12호)	1	2	
29년 11월분(15호)	2	1	
29년 12월분(16호)	7	1	

〈중외일보〉에 대한 〈월보〉의 기록에서 특이한 점은 〈월보〉 제1호에 제시된 ‘차압 삭제 및 불허가 출판물 목록’에 처분내용이 ‘차압’이나 ‘삭제’ 이외에 ‘불문(不問)’이라고 표시된 건이 두 건 존재한다는 점이다. ‘불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2호부터는 ‘불문’이라는 처분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서는 〈월보〉 제작 초기에 기록하다 불필요해졌거나 기입할 다른 건수가 많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실질적 행정처분의 초기 단계였던 ‘주의’로 볼 수도 있지만 〈월보〉 1호의 경우 조선문 신문에 대한 ‘불문’ 건수는 3건인 반면 조선문 신문에 대한 ‘주의’ 건수는 0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불문’을 ‘주의’로 볼 수는 없고, 행정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불문에 부쳤던 기사내용을 기록해 두고 후에 유사한 내용으로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처분에 부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외일보〉의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되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월보〉의 〈중외일보〉 관련 ‘압수’ 및 ‘삭제’ 처분 기록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현재 남아 있는 〈중외일보〉의 지면과 대조해 그 현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6. The Records of <The Monthly Report> and the Status of Newspaper Pages

처분연월일	종별	<월보>기록내용	<중외일보> 지면 현황(위치)	비고
28.9.23	압수 ⁴⁾	고농(高農)조선학생 퇴학이유	지면없음	
28.10.24	삭제	간수의 압박이 가혹한 이유로 공산당원 동맹 절식(絶食)	기사잔존 2면 이상	
28.11.13	삭제	조선공산당 명의 사진입(入)격문 우송(郵送)	기사잔존 2면 최종	
28.11.23	삭제	반사경	기사잔존 1면 좌하	
28.12.3	삭제	조선 OO단	지면없음	
28.12.6	압수	직업화와 추화(醜化)	지면없음 사실	정간
29.2.28	압수	대구 모 중대사건	기사 삭제 2면 중간	금지기사
29.3.16	압수	개정(關廷) 5분도 지나지 않아 일반의 방청금지	기사잔존 2면 이상	
29.3.21	삭제	중대 밀사 두 청년 검거	기사잔존 2면 이상	
29.3.22	삭제	과도기 변법 기관 혁신의회를 조직	기사잔존 2면 이상	
29.4.7	압수	재도(再度) 용천 소작 조합원에게	기사 일부삭제 2면 최종 '지방시론'	선동기사
29.4.7	삭제	조박(朝博) 기부금은 거절 (조박가계에 대한 비난)	관련기사는 있으나 조선박람회 개최 비난 내용은 없음	
29.4.21	압수	권총청년 1명 중 금야(今夜) 본정에서 또 피착(被捉)	호외 21일자 2면 삭제	금지기사
29.4.28	압수	중국학교의 배일선동교육	기사잔존 1면 우중	
29.5.11	삭제	동일부 동아일보 차압기사와 동양(同樣)	기사잔존 2면 중간 엄중한 경계리에 공명단원 등 송국(送局)	
29.6.13	삭제	반사경	기사잔존 1면 최하단	
29.6.18	압수	청년과 학생을 중심으로 새벽에 검거풍 대작(大作)	지면없음	
29.7.21	삭제	일본 전국에 3백명 대검거	지면없음	
29.7.21	삭제	총독부 추락자살 사건	지면없음	
29.7.27	압수	모 중대사건의 학생 5명 불기소 (공산당사건 금지기사)	지면없음	금지기사
29.7.30	압수	살아서 죽음과 같은 참혹한 생애 계속	지면없음	
29.8.16	삭제	의주 국영광(國營鑛) 사건 점차 확대의 형세	기사잔존 2면 좌상	금지기사
29.8.19	압수	활동상 지장이 되는 일체 단체에 철퇴	지면없음	
29.8.23	삭제	맹휴생은 퇴학 신입생 모집 착수	기사잔존 3면 좌상	

29.11.1	압수	동아일보와 동일기사	지면없음	공산당사건, 호외
29.11.7	압수	귀향생도까지 속속 검거	기사잔존 석간2면 좌상	
29.11.21	삭제	치유법(治維法) 위반의 모 대사건	기사잔존 석간2면 좌하	
29.12.7	압수	소학생의 총돌	12월 전체 지면없음	
29.12.7	압수	제1고보(高普) 3,4년생 오늘 아침 돌연 동요		호외
29.12.8	압수	기미경관과 정사복대(正私服隊), 화동 요소를 포위 경계		학생소요사건
29.12.13	압수	11일부터 각 학교 동휴(冬休)		
29.12.13	삭제	다시 함흥 수조(水組)에 대해		수리시설을 부정
29.12.14	압수	오늘 새벽 전 시경 출동		
29.12.19	압수	모지(某地) 의옥(疑獄) 사건의 모대장 필경 장소		
29.12.19	압수	경찰검거 50만에 공판회부 겨우 4만		

특정 신문에 대한 검열의 내용을 살펴볼 때, 검열기록만 있다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와 어떤 빈도로 행정처분이 행해졌는지, 언제 어떤 기사가 문제가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문제가 된 기사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졌는지 어떤 종류의 기사였는지 지면 내 위치는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검열기록을 통해 언제 어떤 기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파악한 후에 실제 신문지면을 통해 해당 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 표에도 나와 있듯이, 행정처분 내용을 실제 신문지면과 대조를 통해 검토해 보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면이나 2면에 위치해 있는 기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2면에 게재된 기사가 많고, 1면의 경우 '반사경'과 같은 특정란의 기사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외일보>는 1면에 국제관련 기사들을 게재하고 2면에는 국내 주요기사들을 실었으며 3면은 사회면, 4면은 학예면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즉, 검열당국은 <중외일보>가 국내 주요기사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주목하고 있었고 특히 '압수'의 경우 대부분 2면에 위치한 기사들이었다. 기사들의 위치도 주로 2면 상단이어서 2면을 펼쳤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월보>의 기사요지 부분만 본다면 간략히 기록되어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면에서는

4) <월보>는 조선인 신문에 내려진 '압수'처분을 '차압'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차압'은 일본인 발행 신문에 내려졌던 처분이었고 실제 조선인 발행 신문에는 '신문지법'에 근거하여 '압수'처분이 내려졌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압수'로 기록하였다.

지면의 우측 상단에 크게 자리잡고 있어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929년 3월 21일자 삭제기사 ‘중대밀사 두 청년 검거’가 대표적이다. 다음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압수’와 ‘삭제’처분을 받은 기사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압수’ 처분을 받은 기사를 살펴보면, ‘금지기사’나 ‘선동기사’와 같이 검열당국이 사전에 유의하고 있었던 기사들이 많았다. 특히 <중외일보>에게 정간처분을 내리게 한 1928년 12월 6일자 사설 ‘직업화와 추화’의 경우, 중국을 예로 들며 ‘배일(排日)운동의 직업화’를 경계하지는 것이어서 자체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지만 <중외일보>가 이전에 게재했던 ‘아일랜드 기행문’이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은연 중에 조선의 독립운동과 연결시킨다고 보아 ‘삭제’ 및 ‘압수’처분을 내렸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즉, 직접적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을 예로 들어 조선의 독립과 연결시키는 기사들에 대해 이전부터 주의를 기울여 오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경무국 도서관의 <중외일보>의 정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그 논조가 총독시정을 비난 공격하고 세계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핑계로 조선이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풍자하고 매사에 편견과 중상(中傷)에 기초해 집필을 함으로써 신부(新附)의 민중으로 하여금 총독정치를 오해하게 하여 민심의 귀추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 적지 않아 당국에서는 그 때마다 그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어 왔다(朝鮮總督府 警務局, 1930, 82~83쪽).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1928년 초봄에 ‘세계일주기행’ 기사에서 아일랜드 독립문제를 연재하여 암암리에 조선의 독립을 주장한 것에 행정 및 사법처분을 가했음에도 다시 ‘직업화와 추화’라는 사설을 게재하여 배일운동을 상양(賞揚)하므로 12월 6일자로 발행정지를 명했다고 말한다. 즉, 이전부터 경고해 왔던 사항이 누적되면 ‘압수’나 ‘발행정지’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금지’ 기사로 지정되어 있었던 조선 ‘공산당 사건’이나 ‘권총강도 사건’, ‘광주학생총동맹사건’ 등을 다룬 기사들이 압수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금지’ 기사란 ‘해제’가 될 때까지 신문에 게재를 금지하는 것으로, 검열당국으로서는 해당 기사가 게재되지는 않는지 주의깊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29년 3월 16일자 기사 ‘개정 5분도 지나지 않아 일반의 방청금지’, 1929년 6월 18일자 기사 ‘청년과 학생을 중심으로 새벽에 검거품 대작’, 1929년 7월 27일자 ‘모 중대사건 학생 5명 불기소’, 1929년 11월 1일 ‘동아일보와 동일기사’로 표기된 기사 등이 공산당 관련 보도로 압수된 기사들이었고, 1929년 12월에 압수된 기사들은 모두 광주학생사건 관련 기사들이었다. 이외에, 화전민의 참상을 전달한 1929년 7월 30일자 기사 ‘살아서 죽음과 같은 참

혹한 생애 계속'이나 조선독립단체의 친일단체 박멸 선언을 전달한 1929년 8월 19일자 기사 '활동상 지장이 되는 일체 단체에 철퇴' 등도 압수의 대상이 되었다. 압수된 기사들은 지면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월보>의 기사요지에서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거나 <언문신문차압 기사집록>을 통해 그 내용을 찾아보아야 했다.

그런가 하면, '삭제' 처분을 받은 기사는 아카이브 상에 지면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1929년 7월, 1928년 12월)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사가 지면에 그대로 남아 있어 어떤 기사가 '삭제'처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총독부 추락자살 사건'이나 '의주 국영 광산 사건', '조선박람회 개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등 단발성 사건에 대한 보도가 많았고, 공산당 사건 관련 단순 보도나 '반사경'과 같은 특정란의 짧은 문구들도 '삭제'처분 대상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외일보>에 내려진 '삭제'나 '압수' 처분의 대상은 검열당국이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금지기사'나 '선동기사'가 많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사들의 위치가 국내기사가 주로 게재되는 2면의 주요부분이었다는 점도 검열당국이 특정기사의 전달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어 민간신문이 허용되어 막 발행되기 시작하고 3.1운동의 여운이 남아 있던 1920년대 초반과 달리, 검열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마련되는 등 검열도 체계를 갖추어 가던 시기에 검열당국이 '쓰지 말라'고 지시한 사항에 <중외일보>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6·10 만세운동과 같은 주요사건 시기에 발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표 6>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압수'와 '삭제'의 대상이 된 기사 중에 사회주의 사상 관련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7. <시대일보> 및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의 특성과 검열장 내 힘겨루기

일제는 1920년대에 도입한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이전에는 전면 금지되었던 조선어 민간신문을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조선어 민간신문이 조선민중의 대변자가 되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총독의 훈시에도 나타나는 바, 지나치게 억누르면 오히려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불온한 사상이 조선민중 사이에 퍼져 다시 3.1운동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한 조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용된 조선어 민간신문들이 소위 '무문국필'을 휘두르지 않도록 검열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고자 하였다. 반면, 주권을 잃어 공식적인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조선민중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조선어 민간신문들은 '언론정부'라는 호칭이 무색하지 않도록 모

처럼 얻은 ‘언로(言路)’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고, 양자는 신문검열이라는 장(場)에서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1920년대 초반 양자의 충돌은 검열당국의 ‘삭제’ 혹은 ‘압수’처분과 오히려 ‘압수’처분을 당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피검열자들의 민족적 저항의식 간의 힘겨루기 형태로 나타나, 검열당국은 이 시기에 대해 ‘각 신문이 서로 다투어 과격 불온한 언사를 희롱하지 않으면 치욕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선 민족 역시 이를 갈망하고 찬성한 감정적 독립 갈망시대’라고 규정했고(立田清辰, 1931, 1), 조선어 민간신문은 검열로 ‘압수를 당하지 않으면 편집이 무능하다고 욕을 먹는’ 시기였다고 회고했다(주요한, 1978). 그렇다 보니, 검열로 인한 행정처분도 1920년대 초·중반에 특히 강하게 발동되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심한 행정처분이었던 ‘발행정지’가 대부분 이 시기에 내려졌다. 가혹할 정도의 행정처분들에 대해 조선어 민간신문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에서 잠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쇄 중에 압수처분이 내려지면 기자들은 득달같이 총독부로 인력거를 몰았다. 이는 <시대일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문제가 있을 때면 진학문이 달려갔고, 진학문만으로 부족할 때는 사장 최남선도 인력거를 몰아 왜성대(倭城臺), 즉 조선총독부 청사로 달려갔다. 이 때의 기자들에 대해 <삼천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때는 그야말로 신문기자들의 위세가 당당하였다. 출하여는 총독부 최고급 관리와 총독 정치를 운운(云云)하고入하여서는 간간(侃侃)한 필연(筆研)을 펴서 천하정세를 논하였다. 무관의 제왕이라면 그때의 기자들을 두고 한 말이라(총독부를 싸고도는 신문기자진, 1934, 9, 101쪽)

검열당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대해 당당하게 항의하고 신문 내적으로는 굳센 필치로 당시의 정세를 논했던, 실로 ‘무관의 제왕’이었던 당시 기자들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히 1920년대 초·중반에는 ‘압수’기사를 놓고 검열당국과 피검열자인 신문기자들이 실질적 힘겨루기를 했고, 이는 물리적인 항의 외에도 문제가 되어 압수된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채 호외를 발행하는 것과 같은 우회적 방법으로도 이루어졌다(이민주, 2018).

그러나 뒤늦게 발행을 시작한 <시대일보>는 다른 조선어 민간신문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1920년대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연구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까닭에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다른 하나의 민간지에 대한 검열은 간과하다시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지 검열과 같은 행정권력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환경에 놓여 있는 신문에게는 더욱 폭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였다. 실제로 <시대일보>에 대한 ‘압수’처분은 기자들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압수’ 처분을 받았다고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일은 아니였다. <시대일보>는 한 달에 적게는 1~3건, 많게는 7~11건에 이르는 ‘압수’처분에 시달렸는데, 특히 발행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압수’처분이 많았다는 것은 검열당국이 행정처분을 통해 새로 발행된 신문을 길들이고자 했음을 시사한다. ‘압수’처분을 받은 기사들의 내용이 사회주의 선동과 관련된 기사가 많았다는 것도, <시대일보>에 사회주의 계열 기자들이 많았음에 검열당국이 유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총독과 친분이 있었고 민족 개량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최남선 발행의 <시대일보>에 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이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분야의 인물들을 두루 포괄하고자 했던 최남선의 의도와, 진보적 사상에 대한 독자들이 요구가 컸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신문판매부수를 올리고자 했던 전략 때문이었다(박용규, 1996).

결국 <시대일보>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신문 미발행으로 발행허가를 취소당하게 된다. 여기에는 잦은 ‘압수’ 처분이 가한 경제적 타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검열당국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이 조선어 민간신문을 문닫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두 신문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 역할을 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당시의 잡지기사들은 신문과 잡지를 문닫게 하는 주된 이유의 하나로 ‘검열난’을 손에 꼽았다. <삼천리>는 창간호에서 ‘원고난, 경영난, 검열난의 3난(三難) 때문에 신문으로는 시대일보, 잡지로는 현대평론, 동광, 조선문단, 청춘 등 수십지가 너머졌다고 직접적으로 <시대일보>를 언급했다(편집후기, 1929, 6).

<시대일보>의 판권을 인수해 새롭게 발행을 시작한 <중외일보>도 경제적 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어 민간신문을 3개로 한정해 유지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던 검열당국은 <중외일보>에 대해서도 매달 1~3건 많게는 7건에 이르는 ‘압수’처분을 내렸다. <시대일보>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검열당국이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예를 빌어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기사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자 이를 ‘발행정지’라는 강한 형태의 행정처분으로 표출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발행정지’는 그렇지 않아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중외일보>에는 큰 타격이 되었다. 검열당국이 ‘회사 책임 간부가 크게 낭패하여 평소의 불근신을 진심으로 사죄’하였다며 42일만에 발행정지를 해제해 주었으나 <중외일보>는 바로 복간하지 못하고 그 다음 달이 되어서야 속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외일보>에 비해 재정적 상황이 양호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무기정간을 당한 후에는 이에 따른 경영난으로 바로 속간호를 내지 못했음을 고려한다면 <중외일보>에 미친 영향은 더욱 컸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검열당국은 ‘금지기사나 ‘선동기사’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다’가 관련 기사가 게재되면 가차없이 ‘압수’나 ‘삭제’처분을 내렸고 <시대일보>의 기자들이 대부분 <중외일보>로 연계된 만큼 사회주의

관련 기사들에도 유의하고 있었음을 ‘압수’나 ‘삭제’처분을 받은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행정처분들이 ‘발행금지’와 같은 형태로 직접적인 <중외일보>의 ‘폐간’을 낳은 것은 아니었지만 잡지기사들이나 기자의 회고록을 보면 항상 검열을 신문발행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외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며 폐간을 지켜본 이하운(1978)은 신문사의 경영난을 내적 압력으로, 그리고 ‘철두철미한 검열’로 한 번 압수당하면 1천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던 당국의 검열정책을 외적인 압력으로 회고했다. 잡지 <동광> 역시 ‘조선의 신문이면 어느 것’이나 ‘어지간한 검열의 무서운 매를 맞아 압수, 정간에 넘어지고 경영난에 부딪치면서 그 험로를 걸어가지 않은 것이 없지만 중외일보 같이 과란곡절이 심한 것은 없다’며 <중외일보>의 상황을 개탄했다(청광, 1931, 12). <동광>은 또한 <중외일보>의 후신인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중앙일보>의 휴간이 피상적 원인은 재정난 경영난이지만 그 근본적 원인은 조선문 신문지법과 ‘검열제도’에 있다며 조선의 검열수준은 일본 신문인까지 항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과격하다고 비판했다(박상호, 1932, 6).

요컨대, 마지못해 허용한 조선어 민간신문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검열당국과 조선민중의 대변자로서 목소리를 높이려는 조선어 민간신문이 충돌하고 있었던 1920년대 검열장에서, 경제적 기반이 약했던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과 이로 인한 행정처분들은 다른 신문들에 비해 더욱 가혹하게 두 신문에 적용되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달 발행일의 1/3이 넘는 날을 압수를 당하고 혹은 무기정간으로 발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경영난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두 신문의 짧은 수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8. 결론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이 허용된 조선어 민간신문은 3개였지만 그동안의 연구들은 지면이 잘 보존되어 있고 최근까지도 그 제호를 유지하고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몇 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호와 발행주체가 바뀌었던 <시대일보>와 그 뒤를 이어 발행된 <중외일보> 등에 대한 연구, 특히 이들에 대한 검열을 주제로 한 연구는 마치 섬처럼 외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대일보>와 그 후신인 <중외일보>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발행된 3대 조선어 민간신문의 하나였던 만큼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검열을 연구할 때에도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축쇄본이나 아카이브, 마이크로필름 등으로 지면이 잘 보존되어 있는 다른 두 신문과 달리 <시대일보>와 <중외일보>는 지면보존

상황이 좋지 않아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특히 이들 신문에 대한 검열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일제 검열의 특성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행히 최근 국가편찬위원회가 남아 있는 신문지면들을 아카이브화하여 일반에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열담당부서의 검열기록들과 남아 있는 지면을 대상으로 일제가 검열을 통해 두 신문을 어떻게 통제하려 하였는지 분석해 보았다.

먼저 〈시대일보〉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검열기록에서 ‘압수’처분만 확인가능한데,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발행초기에 많게는 한 달 11건에 이르기까지 ‘압수’처분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압수된 기사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계열 기자들이 많았던 까닭에 ‘사회주의 선동’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았고 조선통치나 관리에 대한 비판, 민족상황 비판 및 독립정신 고취에 대한 내용들도 압수의 대상이 되었다. 〈중외일보〉 역시 재정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매달 3~4건의 ‘압수’처분에 시달렸고, 해외의 사례를 빌려 암암리에 조선 독립운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무기정간에 처해져 정간이 해제되고도 바로 속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공산당 사건과 같은 사회주의 관련 기사나, ‘금지기사’로 지정되어 있었던 독립단 관련 사건들, 광주학생사건 관련기사 등이 주로 압수의 대상이었고, 단발성 사건이나 짧은 보도성 기사에는 ‘삭제’ 처분이 내려졌다.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이와 같은 검열 처분들은, 언론을 강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검열권력과 이에 저항하며 조선민중의 대변자로 자리잡고자 했던 조선어 민간신문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재정적 기반이 약한 이들 신문에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했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던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연구를 수행함으로써 1920년대 조선어 민간신문에 대한 일제 검열의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직접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는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당국의 행정처분의 내용과 이것이 지면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조선어 신문 관련 일제검열에 대해 커다란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일제는 1920년대 문화정치의 일환으로 조선어 민간신문을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검열,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강한 행정처분을 통해 통제하고자 하였고 그 강도는 재정적 기반이 약한 신문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간이 1920년대로 한정되어 〈중외일보〉의 후신으로 1930년대에 발행된 〈중앙일보〉 및 〈조선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다는 점과, 지면의

부족으로 일제 검열의 내용을 같은 시기에 발행된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와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⁵⁾ 이는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충해 보고자 한다.

5) 후속 연구에서 보충이 가능하겠지만 간략하게나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한 일제의 검열과 <시대일보> 및 <중외일보>에 대한 검열의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실제 검열로 행정처분을 당한 기사의 주제가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의 경우 다른 두 신문에 비해 공산당과 같은 '사회주의' 관련 기사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시대일보>와 <중외일보>의 경우 3.1운동의 여파가 컸던 1920년대 초반(1920년~1923년)과 6.10 만세운동이 발생했던 시기에는 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비교시기 선정 등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CheongGwang (1931, December). New camp of JoongAng Ilbo. *DongGwang*, 28, 84-85. [청광 (1931, 12). 세동채가는 중앙일보의 신진영(新陣營). <동광>, 28호, 84-85.]
- Choi, M., & Kim, M. (1978). *The history of Korean pres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eoul: Ilwolseogak. [최민지·김민주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 Dachida, K. (1931, January). Reflections on the media landscape of the 1930s in Chosun. *The Police Bulletin*, 297, 16-19. [立田清辰 (1931, 1). 一九三〇年の朝鮮出版界の回顧. <警務彙報>, 297號, 16-19.]
- Editor's comment (1929, June). *Samcheonri*, 1, 50. [편집후기 (1929, 6). <삼천리>, 1호, 50.]
- Han, K. H. (2019). *Colonial writing territory*.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한기형 (2019). <식민지 문역>.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Han, K. M. (2003). A study on critical articles on christianity. *A Journal of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63, 10-19. [한규무 (2003). 1920~30년대 일반신문의 기독교비판기사 검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63호, 10-19.]
- Han, M. (2015). *The allowance on rebellion*. Seoul: Somyong. [한만수 (2015). <허용된 불온>. 서울: 소명출판.]
- Hong, S. (2022). Yi Yuk-sa's media activities as a reporter of "Jungwae Ilbo" and literary motif of loss of hometown. *The Leaned Society of Sanghur's Literature*, 64, 179-231. [홍석표 (2022). 이육사의 <중외일보> 기자 시기 언론 활동과 고향 상실의 문화적 모티프. <상허학보>, 64권, 179-231.]
- Jeon, S. (2006). A study in selection and exclusion of cultural domination ideology-centered in Sidaeilbo and Kyungsungilbo. *Japanese Cultural Studies*, 19, 265-286. [전성곤 (2006). <지배 이데올로기>의 선택과 배제에 관한 고찰: <시대일보>와 <경성일보>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19집, 265-286.]
- Ju, Y. (1978). Manbosan incident, president Song, and the editorial. In An Institute for Korean Newspaper (Ed.), *The fifty unknown story of the press* (pp. 105-120). Seoul: An Institute for Korean Newspaper. [주요한 (1978). 만보산 사건과 송사장과 그 사설. 한국신문연구소 (편), <언론비화 50편> (105-120쪽).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Jung, J. (1975). *History of struggle of Korean press under Japaneses colonial rule*. Seoul: Jungeumsa. [정진석 (1975).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서울: 정음사.]
- Jung, J. (2012).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prosecution and suspension on a journey through Ireland. *Newspapers & Broadcasting*, 494, 80-87. [정진석 (2012). 아일랜드 기행문 꼬투리 총독부, 기소·정

- 간 탄압. <신문과 방송>, 494호, 80-87.]
- Kim, D. (1980). *History of Imperial Japan's colonial policy in Korea*. Seoul: Hangilsa.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서울: 한길사.]
- Kim, M. (1996). *History of Korean press*. Seoul: Namam.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출판.]
- Kim, N. (1982). *A Study on the newspapers: Sitai Ilbo, Choong-Oi Ilbo, Central Daily News and Chosun Choong-Ang Ilbo*.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김남미 (1982). <시대일보·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P. (1978). Eighteen years of striving to avoid being a journalist. In An Institute for Korean Newspaper (Ed.), *The fifty unknown story of the press* (pp. 209-223). Seoul: An Institute for Korean Newspaper. [김팔봉 (1978). 기자물 안 들려고 애쓴 18년. 한국신문연구소 (편), <언론비화 50편> (209-223쪽).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Kim, Y. (2014). Kim Kijin and Jungwoe Ilbo. *The Modern Bibliography Review Society*, 10, 221-238. [김영애 (2014). 김기진과 <중외일보>. <근대서지>, 10호, 221-238.]
- Lee, H. (1978). Six years as a journalist, watching closures unfold. In An Institute for Korean Newspaper (Ed.), *The fifty unknown story of the press* (pp. 77-87). Seoul: An Institute for Korean Newspaper. [이하운 (1978). 폐간만 지켜본 기자생활 6년. 한국신문연구소 (편), <언론비화 50편> (77-87쪽).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 Lee, H. (2018). The publication of Dongmyeong and Sidaeilbo and Abe Mitchie. *The Modern Bibliography Review Society*, 18, 723-732. [이형식 (2018). <동명> <시대일보> 창간과 아베 미쓰이에. <근대서지>, 18호, 723-732.]
- Lee, M. J. (2018). A study on the Korean private newspapers' response to Japanese colonial censorship.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62(1), 69-97. [이민주 (2018). 일제 검열에 대한 조선어 민간신문의 대응양상 연구. <한국언론학보>, 62권 1호, 69-97.]
- Lee, M. J. (2020). *Empire and censorship*. Seoul: Somyong. [이민주 (2020). <제국과 검열>. 서울: 소명출판.]
- Matsuzaki, T. (1919, June). The necessity of integration agencies. *Chosun and Manjuria*, 144, 37-38. [松崎時勉 (1919, 6). 言論の開放と内鮮兩民融和の機關が必要. <朝鮮及滿洲> 144號, 37-38.]
- Park, S. (1932, June). Behind the sudden suspension of JoongAng Ilbo. *DongGwang*, 34, 26-32. [박상호 (1932, 6). 돌연 휴간한 중앙일보 분규사건의 이면. <동광>, 34호, 26-32.]
- Park, Y.-G. (1996). A study on Sidae, Jungwoi, Jungang, Chosun Jungang Ilbo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Media Information, 2, 109-148. [박용규 (1996). 일제하 시대, 중의, 중앙, 조선중앙일보에 관한 연구. <언론과 정보>, 2권, 109-148.]

Park, Y.-G. (2009). Newspapers and national movement in the mid 1920s(1924~1927):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the left-wing nationalist group.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9(4), 277-312. [박용규 (2009). 1920년대 중반(1924~1927)의 신문과 민족운동: 민족주의 좌파의 활동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권 4호, 277-312.]

Research Society for Censorship (2011). *Colonial censorship: Institution, text, practice*. Seoul: Somyong. [검열연구회 (2011).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 서울: 소명출판.]

Seo, B. (1978). The great flood in 1925 and incident of Bukpung-hoe. In An Institute for Korean Newspaper (Ed.), *The fifty unknown story of the press* (pp. 169-192). Seoul: An Institute for Korean Newspaper. [서범석 (1978). 을축년 대홍수와 북풍회사건. 한국신문연구소 (편), <언론비화 50편> (169-192쪽). 서울: 한국신문연구소.]

The press corps surrounding the government-general (1934, September). *Samcheonri*, 6(9), 100-103. [총독부를 싸고도는 신문기자진 (1934, 9). <삼천리>, 6권 9호, 100-103.]

Yu, G. (1930, August). Section for consideration of opinions on editing social section. *Cheolpil*, 2, 20-24. [유광렬 (1930, 8). 사회면 편집에 대한 의견고심란. <철필>, 2호, 20-24.]

Yu, S.-H. (2019). The role of newspapers as exchange apparatus of literary marketpla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Korea. *Korean Studies*, 1, 215-238. [유석환 (2019). 식민지시기 문학시장의 교환기구로서의 신문의 역할. <한국연구>, 1호, 215-238.]

Historical Material

警務局 圖書課 (Sep. 1928 ~ Dec. 1929). <朝鮮出版警察月報>

朝鮮總督府 警務局 (1930). <朝鮮に於ける出版物概要>

朝鮮總督府 警務局 (1938). <朝鮮出版警察概要>

朝鮮總督府 警務局 圖書課 (1932). <諺文新聞差押記事輯錄>

최초 투고일 2024년 08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0월 01일

논문 수정일 2024년 10월 07일